## 투데이 칼럼

# 우려되는 한반도 긴장

정 복 규
논설위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미국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짐짓 고개를 돌리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전력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지금 평택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민군은 2만8천500명이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들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억지력은 상당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

문제는 최근 일련의 우려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들이다. 미국은 중국 압박을 계속하면서 대만해협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는데도 미국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미국이 과거의 미국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 미국은 과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는 중국 이외의 다른 동맹국들, 즉 일본이나 한국 등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억지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놓고 지금 많은 동맹국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억지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과연 한국에게 충분히 억지력을 행사해 주겠는가 하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국 두 나라 사이에 간극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력과 억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도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다. 한편 보이지 않으면서 한반도 주위를 선회하는 잠수함이 있다. 토마호크 핵미사일을 장착해서 상시 순환 배치식으로 잠수함에 배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미 양국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도발에 맞춰서 우리의 전력 증강은 불가피하다. 이런 군비 증강 경쟁이 안보를 담보하지 못하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도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대화로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관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게 될 가능성도 관심사다.

담대한 구상에는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 단계,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단계 등 3단계로 나눠져 있다.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광물과 한국의 식량 맞교환 프로그램 등이 들어가 있다.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북한을 국제 금융시장에 편입시키는 내용이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문제는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다.

중국이나 북한 모두 오랫동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패를 했다. 이제 북한 김정은은 미국도 못 믿겠다, 그리고 한국도 못 믿겠다고 판단한다.

경제 위기를 국내적으로 처리하고 군사강국의 대열로 들어가려고 한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외교 정책 노선의 변화를 완전하게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시진핑 3연임이 어느 정도 자리 잡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한반도 문제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시기는 내년 초반 정도가 될 것 같다. 지금의 도발 국면을 지나서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일 지도 관심사다. 남북한 간 혹은 북미 간의 또 다른 협상 국면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 G7 외무장관,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 잠정 합의

독일 안나레나 배어복(오른쪽 두 번째) 외무장관이 지난 3일(현지시간) 독일 뮌스터에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G7은 러시아산 원유의 일정 가격 이상 거래를 막는 가격상한제를 내달 5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 뉴멕시코 주지사 지원 유세하는 바이든 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미셸 루한 그리셤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지하는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 사 설

### 외국인 계절노동자 착취

농촌 일손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한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

모집 과정에서부터 브로커가 개입하고 근로계약도 비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최장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이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계절노동자에게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190여만 원의 월급이 보장된다.

농장주가 숙식을 제공하는 댓가로 일부 금액을 제외하면 150여 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필리핀 노동자의 월급 통장은 월급으로 지급된 154만 원이 통장에 찍혔다.

그런데 고스란히 '김 모 씨' 계좌로 빠져나갔다. 다른 계절노동자의 통장도 마찬가지다. 월급날마다 돈을 쓸어가는 것이다. 계절노동자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은 어느 브로커다.

그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김 모 씨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인력관리를 하며 노동자들의 돈을 송금했다. 필리핀 교민으로 전해진 김 씨는 계절노동자들을 모집해 한국에 보낸 인물이다.

그는 자신을 '필리핀 주정부 공무원'이라고 소개한다. 한국으로 보낸 계절노동자들의 월급은 필리핀 주정부가 별도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말처럼 필리핀 현지에서 '농민수당 급여'로 월급이 지급됐다. 1만 5천 필리핀 페소, 우리 돈으로 35만 원에 불과하다. 체류 기간을 모두 채우면 2만 페소를 더 쳐줬다.

그래도 한 달 월급은 90만 원이 채 되지 않았다. 한국 농가에서 받은 약 150만 원이 필리핀의 김 씨에게 송금되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떨어지는 돈은 80여만 원이다.

노동 대가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월급을 모두 빼내가는 지급 방식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김 씨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 어느 지자체장의 성추행

전북 도내 어느 지자체장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던 사실을 문제 삼고 나서 피해자 측이 반발에 나섰다.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한 달 전, 지자체장을 경찰에 고소한 지 며칠 만에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상태라고 알려왔다. 하지만 경찰은 지자체장의 혐의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A씨도 지역 사회에서의 신변 불안 등의 이유로 취하했던 것이라며 지자체장이 고발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지자체장이 자신을 수시로 불러냈다며 갑질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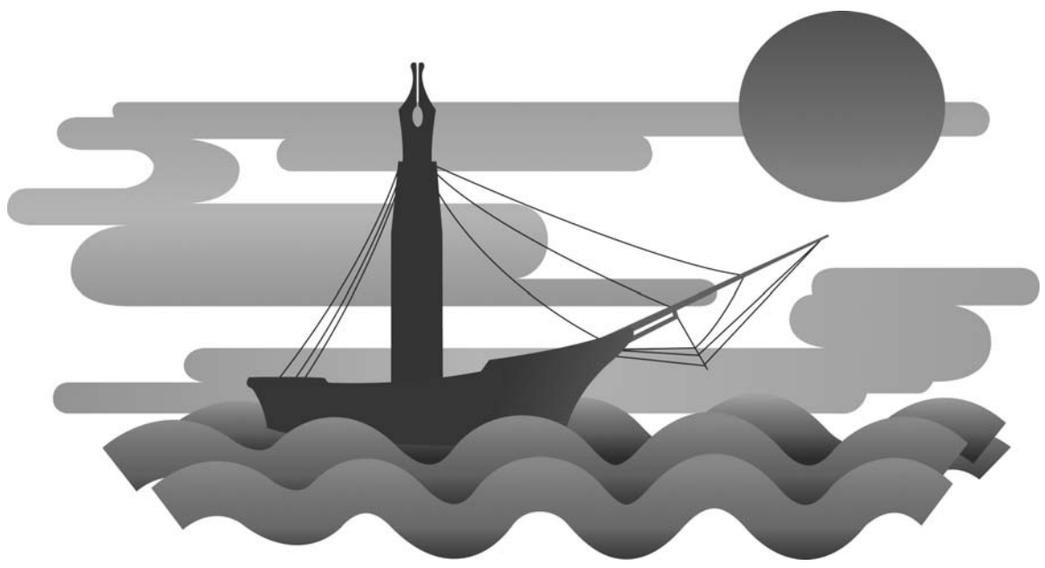
계약직으로 일하던 50대 A씨는 지자체장으로부터 갑질은 물론 추행을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한다. A씨는 현장에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자체장이 "우리는 한배를 탔다"고 말하며 100여 미터 떨어진 곳까지 끌고 갔다고 주장한다.

7개월 뒤에는 술에 취해 집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며 밤에 자신의 집 앞으로 A 씨를 불러냈다고 말한다. 본인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A씨를 불러내는가 하면, 휴일에 라면을 끓여달라며 연락하기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계약 기간이 끝난 9월에서야 권익위에 신고한 A씨는 좁은 지역 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가해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A씨를 수차례 불러낸 사실은 있지만 친분이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부탁을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가해자가 권력자일수록 두려움을 느껴 고소를 취하하려는 피해자들의 사례가 많다. 취하하려는 이유를 무시하고 주변적인 사실로 폄훼하려 하는 것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